

# 광주 기초의회 '의정비 줄인상'... "공청회 왜 하나" 무용론

### 5개구 상한액 결정...소급적용 위해 주민 의견수렴 부실 북구 의원 절반 넘게 격직...취약층 정치참여 취지 '공색' 인상 사유 설명도 없어...“내역공개” 투명성 강화 필요해

광주 각 자치구들이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너도 나도'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을 두고 의정활동비를 인상을 검토할 수 있는데도 소급적용을 위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인상을 결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광주 5개 자치구 '상한액' 줄줄이 인상

10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북구와 동구, 남구, 광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 달 40만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주민공청회를 연 북구는 3일 뒤인 지난 7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 의정활동비를 상한액인 150만원까지 인상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3033만원(월 253만원)을 더해 4353만원 등 매달 363만원을 받았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 월정수당 3084만원(월 257만원) 등 연간 4884만원, 매달 407만원을 받게 됐다.

서구도 지난 6일 의정활동비를 1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고 동구와 남구, 광산구도 8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광주 각 자치구가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초의원회의 의정활동비 최대 지급 범위가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확대됐다.

#### ◆소급적용 눈물어 "의견수렴 충분치 않

아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최대 상한액까지 줄줄이 인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확정하면 올해 1월부터 의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개월 이내 시점인 이날 14일 이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를 마무리해야 의원들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활동비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각 자치구에서 진행된 공청회 역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각종 의견수렴에 한계를 보이는 등 의정비 인상 결정을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당장 지난 5일 북구가 연 공청회에는 주민 약 30명만이 참석했고 공청회 토론이 끝난 뒤에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주민들은

3명 정도에 그쳤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눠준 설문지만 작성한 채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렇게 걸린 설문지는 25장에 불과해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의정활동비 인상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물론 주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 형태의 의견수렴을 두고 우려가 나왔음에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 ◆투명성 없는 의정활동비 인상 이유도 공색

의정활동비 찬성 측은 장애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정치참여를 위해 이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미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간 100~120일 이내 회의를 하면서 매달 400만원에 육박하는 의정비를 수령, 특히 다수 의원들은 별도의 수익활동을 위해 겸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북구의회 의원들의 경우 총 20명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수익이 있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의원은 개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와 소매업, 임대업 업종의 회사 2곳의 대표로 재직, 최무송 부의장은 전기안전관리 용역회사 공동대표로 재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달성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북 고창 소재 태양광발전소 대표로 있다.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은 개인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건설장비 임대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강성훈 의원도 보험 관련 회사에서 FC라는 직책을, 한양인 의원은 개인 부동산임대업과 한 건설회사 이사를 겸직 중이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받는 것은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이 있고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수준만큼 인상됐다"며 "의정활동비 인상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인상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근거 제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한 자치구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의정활동 전념을 위해 겸직 금지를 강화하고 의정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인상한 금액만큼 활동비를 공개하는 등 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최고한도액 인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슬비기자



##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장 해빙기 안전감사 실시

### 봄철 지반붕괴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현장 긴급 점검 나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봄철을 맞아 지반 융해 등으로 취약해진 여수 죽림1지구, 남악 오픈 택지개발지구 등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해빙기 안전감사를 실시했다.

안전감사는 전남개발공사가 2022년부터 신규 도입한 안전점검 기법으로서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추적관찰을 실시하여 동일·유사한 위험요인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번 안전감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건설안전 특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시설물 균열·변형 ▲흙막이시설 상태 ▲굴착사면 변형 ▲지반 침하 ▲가설구조물 상태 등 해빙기 중대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은 지속 시정조치 중이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향후 유사한 위험요인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형수 안전감사실장은 "봄이 되면서 취약한 지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빈틈없는 점검과 사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1전비, 고창 동호해수욕장 찾아 환경정화활동 실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지난 7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역주민과 상생차원에서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을 방문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는 장병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해수욕장 일대에 버려진 페비닐, 유리병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활동은 지역 행사인 \*봄어제를 앞두고 실시돼 의미를 더했다. 봄어제는 어촌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전통 축제로, 1전비에는 행사 구역 중 하나인 동호해수욕장을 정화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임형택 기자

## 전남도, 5000억 규모 공익직불금 대면접수...4월30일까지

전남도는 올해 5000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4월30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접수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

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다른 농업인은 신청해야 한다.

농지면적 0.5ha(헥타어)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연료진흥재단  
Korea Energy Pension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아예녹남에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	급여비
5분위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1분위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험료 10%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보험료 9%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